



## 코로나19, 1년을 돌아보며

**조흥식**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인류는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평생 경험하기 어려운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 작년 연말에 중국이 우한 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COVID-19) 집단 발생을 원인 미상 폐렴으로 세계보건기구(WHO)에 보고한 지 벌써 1년이 다 돼 가고 있다. 올해 초 1월 20일, 중국으로부터 첫 번째 환자가 우리나라에 유입될 때만 해도 그 위험을 제대로 파악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제 11개월이 지난 지금을 초를 되돌아보면, 금세 끝날 것으로 여겨졌던 것들이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팬데믹 상황으로 전개되면서 사망자 등 직접 피해는 물론이고 사회경제적 피해까지 나타나고 있다. 바이러스 하나가 세상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은 비교적 잘 대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몇 번의 고비는 있

었지만 방역 성공에 대한 해외 여론의 관심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국민들과 상호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개방성의 원칙, 정보를 숨기지 않고 제때에 알려 주는 투명성의 원칙, 행정부 관료와의료 전문가, 그리고 국민들의 좋은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민주성의 원칙 등 K-방역의 3대 원칙하에 ‘검사-추적-치료-신뢰’라는 4T(Test-Trace-Treatment-Trust)를 체계화한 덕분이다. 사실 K-방역은 정부와 방역 당국의 체계적인 관리, 의료 종사자와 자원봉사자들의 헌신, 시민들의 협력 등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으며, 아직 방심할 수는 없지만 한국의 감염병 관리 대응체계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도 백신과 치료제가 성공적으로 개발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코로나19 사태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던지고 있다. 첫째, 인수공통감염병의

바이러스는 변형이 심해 이를 완전히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준 점이다. 제러드 다이아몬드 박사는 저서 <총, 균, 쇠>에서 감염병이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의 발전과 관련성이 크고, 가축을 키우면서 홍역, 결핵, 천연두, 인플루엔자, 그리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이 번지게 되었다고 지적한다. 인간이 인간에 대한 착취를 넘어 자연에 대한 착취까지 하는 결과 야생동물들이 서식지를 잃고 인간의 생활공간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인간을 숙주로 삼아 바이러스들이 무한 진화해 갈 것이며, 결국 인류의 존재 자체를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그러니 평소 생활방역의 중요성과 기후 변화에 대한 대처가 무척 시급함을 알 수 있다.

둘째, 팬데믹 상황은 사회에서 제일 고통받는 자는 소외당하고 삶이 팍팍한 폐쇄병동 환자, 비정규직 노동자, 장애인, 노인 빈곤층, 노숙인들에게 더 집중된다는 점이다. 아동,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돌봄이 가족, 특히 여성에게 떠맡겨 지기도 하고, 이들이 감염병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으므로 체계적인 돌봄 시스템이 시급히 갖춰져야 한다는 게 정설이다. 셋째, 이윤을 앞세우는 공공시스템의 민영화와 같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조정이 필요하며, 오히려 자원의 생산과 공유를 위한 국제적 공조체계가 더 필요함을 보여 주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대면 접촉과 함께 비대면 접촉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온라인의 증대, 전

자상거래 등 비대면 접촉이 증시되는 사회가 불가피하게 급속히 확대될 것이다. 다섯째,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미증유의 사태에 대한 위기 대처 능력은 국가와 시민의 역량에 달려 있음을 보여 준 점이다. 한국은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는 개방적이며 민주적인 방식으로 위기에 대처하는 등 공공성 가치를 기반으로 한 정부와 시민의 협력과 연대, 성숙한 시민정신을 통해 세계 선도국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과 희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때, 이제부터는 지금껏 한국 사회를 지탱, 발전시켜 온 성장 중심의 경제와 정치 논리를 지양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사람 중심의 포용복지국가를 만드는 데 사회적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포용복지국가의 방향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방역이든, 경제든 공공성 가치를 기반으로 한 정부의 민주적인 행정체계와 리더십이 필요하다. 의료·건강과 안전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생활 서비스에 대한 공공체계 구축이 풀뿌리 지역에서부터 중앙정부에 이르기까지 촘촘히 만들어져야 한다. 아직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역은 매우 중요하다. 미국 화이자 제약회사가 90% 수준의 백신을 개발했다고 하지만 백신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연령, 소득, 성별, 기저질환, 위험 인식, 백신 가격 등에 따라 실제 백신을 맞을 것인지 등에 대한 국

민들의 수용도를 미리 살펴보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이런 ‘의학 백신’은 당장 없기에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생활방역 백신’인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밀집·밀폐·밀접 장소 피하기 등을 꼭 실천하도록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게 좋다.

둘째, 취약집단을 포함한 서민들의 민생을 살펴보고, 사회생활 전반적인 차원에서 그들의 소득 보장과 복지서비스와 돌봄서비스를 잘 챙겨야 한다. 2008년 경험한 세계 금융위기보다 이번 코로나19가 준 경제사회적 위기가 훨씬 더 심각하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이런 현실에서 국가가 취약집단을 우선 살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IMF, World Bank 등 세계 경제기구들도 더욱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 문제의 해법 찾기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1990년대부터 나온 포용 성장이라는 말도 처음부터 경제사회 불평등 문제의 해결 단초로 사용돼 온 용어다.

셋째,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종합적인 안전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전염병 확산, 불안정한 기후 변화, 지진과 홍수 등의 자연재해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일상적이고 구조적인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사회 복원력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비상 상황에서 일정 기간을 견뎌 내며 일상으로의 복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식량·의료·에너지 등 기본 필수 자원을 시민에게 신속, 정확하게 공급하게 하는 꼼꼼한 기획과 매뉴얼이 필요하다. 따라서 중앙·지방 정부 간의

체계적인 업무 분담과 함께 효율적인 컨트롤타워를 두어 피부에 닿는 정교한 대응 매뉴얼을 개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비대면 접촉의 중요성이 제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더욱 중요시되기 때문에 뉴노멀 시대의 사회적 가치와 규범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대토론과 합의, 협상의 기회를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의 K-방역 3대 원칙은 여기서도 적용된다. ■